

데스크칼럼

장승기

산업부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추진 중인 반도체 공장 신설 부지로 전남광주특별시가 유력시되고 있다. 호남 첫 반도체 공장 건설 지역으로는 광주시와 전남 장성군에 걸쳐 조성되는 '첨단3지구'가 거론되면서 구체적인 투자 방안을 담은 소문까지 돌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기업들은 '신중론'을 펴고 있다. 더욱이 최근 호남 반도체 투자설이 확산되자, 기업들은 더욱 말을 아끼고 있다. "아는 바가 없거나 정해진 바가 없다". 또는 "일본 등 해외 공장도 검토하고 있다"고 선을 긋는다. 여기에 해당 기업 직원들까지 나서 지방 공장 추진에 대한 현실성과 효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반도체 생산 공장 부지가 '호남', 특히 '광주 첨단3지구'로 유력하게 거론된 것은 삼성전자가 지난 달 첨단3지구에 16만5300㎡(5만평) 부지를 확보하면서부터다. 또 기업 관계자들이 지난달 첨단3지구와 군공항 이전 예정지 일대를 방문해 입지 여건과 기반 시설 등도 살펴보고도 했다. 업계에서는 반도체의 기본 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새기는 반도체 전공정 공장은 용인과 평택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 후공정 공장은 광주 등 호남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또 패키징 공장은 상대적으로

삼성전스 반도체 공장 최적 입지는 '광주·전남'

전력과 용수 부담이 적고 인력 수급 측면에서도 광주·전남의 여건과 부합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패키징을 비롯한 일부 후공정 시설을 광주·전남에 둘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해 11월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인 플렉트그룹 인수를 마무리하고 한국 생산라인 구축 계획을 밝히면서 후보지 중의 한 곳으로 광주를 지목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가 첨단3지구 인근 전남 장성까지 확대해 반도체 산단을 조성할 것으로 지역 경제계는 관측하고 있다. 첨단3지구에는 국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구축돼 있고, 전남 1호 데이터센터도 조성되고 있다. 또 전남 장성과 맞닿아 있고 호남고속도로, 국도13호선, 빛고을대로 등 주요 교통망이 연결돼 이동이 편리하다. 더욱이 광주 도심과 근거리가 있고,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AI연계도 등도 내년에 개교할 예정이어서 최적의 입지로 평가 받고 있다.

그동안 반도체 공장 후보지로는 첨단3지구 이외에도 광주와 전남 함평군에 걸쳐 있는 '빛그린산단', 전남 해남, 광주 공항공 부지 등이 후보지로 거론돼 왔다. 빛그린산단은 첨단3지구처럼 광주 중심부와 가깝기 때문에 이점이 있고, 해남은 용수와 에너지가 감점되어서 주목 받고 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 신설 계획은 이달 말 확정·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말 청와대에서 주요 그룹들과 간담회를 할 때 구체적 계획이 공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주

요 그룹 총수와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대통령실도 반도체 공장의 비수도권 신규 투자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력이 남거나 발전 설비와 가까운 비수도권에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또 일각에서는 다음 달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타운홀미팅을 진행하며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어찌됐든 광주·전남은 국내·해외 반도체 공장 입지의 핵심 조건을 모두 갖춘 지역이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공장 부지로 '전력·용수·인재' 등 삼박자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안정적인 전력망과 수요, 지역 인력·협력사 생태계가 경쟁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전남은 수도권보다 전력 수급이 용이하고, 재생에너지도 풍부하다. 또 반도체 공장의 광주·전남 유치는 현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기조와도 맞물린다. 이 대통령은 최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낸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 반도체 산업이 지역균형발전의 한 축이라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 여기에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반도체 특별법에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방안과 인허가 특례 등의 내용도 지방 주, 광주·전남의 투자 당위성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

이처럼 광주·전남은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전력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반도체 공장 부지로 손색이 없다. 또 전력망 병목 현상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라는 정책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어 최적의 후보지이다. 정부·기업의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과 결단을 믿는다.

기고

김광훈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 운영위원
광주시속기술평가발전협의회 위원장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하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은 기후위기 대응을 '계획'에서 '결과'로 만들어야 하는 절대적 타이밍과 맞물려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는 에너지를 지역의 핵심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고(제1조), 에너지자립 도시를 조성한다(제228조)고 명시돼 있다. 7월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특별시는 2050년 에너지자립과 탄소중립을 핵심 공약으로 삼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에너지자립 도시 조성에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에너지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역은 현재 전력계통 포화로 2031년까지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계통접속이 전면 제한된 심각한 상태이다. 이대로라면 미래 성장동력이 될 에너지 첨단산업 육성은 시작도 하기 전에 불가능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통합특별시장이 계통 포화 해소 대책을 행정의 최우선 순위로 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내부적인 계통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외부의 병병도 만났다.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한 10개의 345kV 초고압 송전선로가 통합특별시의 심장부를 관통해야 한다는 정부의 계획이다. 이러한 일방적인 송전선로 건설은 지역 훼손과 식생 변화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전자파 피해·조

통합특별시,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꿈꾸다

망권 문제를 필연적으로 동반한다. 이는 지형, 생태, 시민 생활환경, 주민 수용성까지 엄격히 다뤄져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이를 타개할 실효성 있는 대안이 있다. 첫째, 노후화된 한빛원전 1·2호기를 예정대로 폐쇄하고, 확보되는 약 1.9GW의 여유 계통 용량을 지역 재생에너지에 우선 배정하도록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정을 이끌어내야 한다. 여기에 원자력 안전계획과 주민 보호 조치 등이 담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빛 원자력발전소 안전 조례' 제정을 병행해 지역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에너지자립을 앞당기는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

둘째, 중앙집권적인 전력망에 의존하지 않는 자체적인 계통 안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호남권 전력계통권을 조속히 확보하는 정부 협상을 추진하는 한편, 분산에너지 특구를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 대규모 송전선로가 필요 없는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의 특성을 극대화해 지역 내에서 전력을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현실화할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 설치와 '전력 계통접속 안정화 종합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셋째, '상생형 재생에너지 복합 모델' 구축이다. 전남의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약 8.9GW로 전국 1위(전력 자립도 189%)인 반면, 광주는 약 0.7GW(자립도 9.8%)에 불과해 극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전남의 풍부한 자연과 광주의 시민참여 여량이 결합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5개 햇빛발전협동조합, 22기 발전소, 15개 에너지

전환마을을 운영하며 민간 협치의 모범을 쌓아온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의 성과를 '전남광주형 에너지전환마을'로 확대·조성해야 한다.

영농형 태양광을 통한 농촌형 모델과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도시형 모델을 투트랙으로 병행해, 공공 유휴부지 대부료를 1% 수준으로 낮추고, 20MW 이상 대규모 발전 사업 인허가 시 시민대표의 의무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지역 내 이익 공유를 극대화하고 진정한 재생에너지 거버넌스 구축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올바른 길이다.

이 모든 구상은 강력한 실행력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27개 시·구·군에 '에너지지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 활동가 육성과 예산 투자가 전폭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컨트롤타워인 '기후에너지부시장'직을 신설하고, 그 지휘 아래 재생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재생에너지 가속지역' 지정, 공공·산업 부문 REC100 전면 도입을 일사천리로 추진해야 한다.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지역의 생존 전략으로 해결하는 출발점은 단연 '강력한 에너지 전환'이다.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고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새롭게 탄생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엄중한 책무이다.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에너지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선진적인 사회·경제 공동체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해야 한다. 시민의 참여와 통합특별시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결합될 때, 우리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에너지 수도'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취재수첩

경매로 밀려나는 집·가게가 보내는 경고음

송대웅
산업부 차장



집은 삶의 터전이고, 자영업자에게 가게는 생계의 터전이다.

최근 광주에서는 이 두 공간이 동시에 범민 경매시장으로 밀려나고 있다. 올해 1~5월 광주지역 집합건물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635건으로 지난해 연간 신청 건수(608건)를 이미 넘어섰다.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 상가 등 시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공간들이 채무를 견디지 못하고 경매시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눈에 띈 것은 증가 속도였다. 광주 집합건물 강제경매 신청은 2020년 642건에서 2021년 497건으로 줄었지만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24년에는 808건까지 늘었다. 지난해 다소 감소했지만 올해는 불과 5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수준을 넘어섰다. 단순한 일시적 현상으로 보기 어려운 흐름이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경매 물건의 성격이다. 집합건물은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시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동산이다. 공장이 토지보다 실제 거주와 생계에 직접 연결된 자산이다. 이들 부동산이 경매시장에 대거 등장한다는 것은 가게와 자영업자의 부담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상가 경매 증가는 지역 상권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코로나19 이후 회복을 기대했던 자영업 시장은 고금리와 소비 위축,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여전히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장사가 되지 않으면 대출로 버티고, 다시 대출로 연명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하지만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시점이 오면 가게는 경매시장으로 향하게 된다.

주거용 부동산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금리 부담은 늘었지만 소득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역시 위축돼 자산을 처분해 현금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 결국 채무를 감당하지 못한 일부 가구가 경매라는 마지막 단계에 내몰리고 있다.

물론 경매 건수 증가를 곧바로 경제위기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각종 채권 분쟁, 투자 실패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최근 증가세를 고려하면 지역경제 전반의 어려움과 무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집과 가게는 시민들의 삶이 쌓여 있는 공간이다. 그 공간들이 경매시장으로 밀려나는 일이 계속 늘어난다면 단순히 경매 건수 증가로만 볼 문제가 아니다.

지금 광주의 경매 통계는 지역경제가 보내는 또 하나의 경고음일지 모른다. 숫자 뒤에 가려진 시민들의 삶을 함께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다.

사설

지역 개인파산 신청 급증 희생책 마련 절실

광주·전남권 개인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울 들어 개인파산 접수 건수가 매달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법원통계월보를 보면 광주희생법원의 개인파산 접수 건수는 올해 2월 134건에서 3월 184건, 4월 213건으로 증가했다. 5월에는 177건으로 다소 주춤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만큼 지역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건 수는 많지 않지만 기업들의 파산신청도 잇따르고 있다. 법인파산 접수 건수는 2월 5건, 3월 12건, 4월 5건, 5월 7건으로 집계됐다.

물론 광주희생법원이 광주·전남, 전북, 그리고 제주 일부 지역을 관할, 이런 수치를 광주·전남만의 통계로 보기 어렵지만 지역 경기흐름과 경제상황을 가늠해볼 수는 있는 지표로는 활용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개인파산 증가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데다 앞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개인파산은 현재보다 이미 지나온 경제 흐름을 확인해주는 대표적인 경기 후행지수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즉, 고금리·고물가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생활비 부담이 커져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해서 즉시 파산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대출 등으로 충당하며 버티고 버티다 더 이상 '변제 불능'상태가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는 카드라는 것이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최근의 개인파산 증가가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경제적 부담이 한계점에 도달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시기 정책자금과 금융권 대출로 버텼던 자영업자 등이 엔데믹 이후에도 기대만큼 소득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고금리와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대기업 중심 제조업보다 자영업과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열악한 지역경제구조도 이런 현상에 한 몫하고 있다.

여기에 기업 부문의 위기를 의미하는 법인파산도 잇따르고 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개인·법인 파산의 동반 증가의 경우 소비와 투자, 고용이 위축되는 국면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지역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선택으로 개인파산을 선택한 이들의 희생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광주·전남에서 벤처기업하기 힘든 이유

광주·전남지역에서 벤처기업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보여주는 분석자료가 나왔다.

벤처기업협회가 최근 발표한 '지역 벤처기업 현황 및 지원정책 분석' 보고서를 보면 이 지역 벤처기업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벤처기업(3만 8369개)의 63.2%가 수도권(2만4172개)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광주(657개)와 전남(712개)은 각각 1.7%, 1.9% 수준에 머물렀는데 이는 전국의 3.6% 수준에 불과했다.

광주 벤처기업은 소프트웨어 개발(13.2%), 전자부품(8.7%), 기타 제조(7.9%) 등의 순으로 분포했고 전남은 기타 제조(11.1%), 음식료(10.5%), 전자부품(9.4%) 순이었다.

이들 기업중 청년층과 신규 창업 기업의 수도권 풀림현상도 나타났다. 대표자가 30세 미만인 청년 벤처기업중 수도권 기업 비중이 72.8%였고 신규 벤처기업인 '루키 벤처기업' 역시 수도권 비중이 68.7%나 됐다.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권의 청년 벤처기업 비중은 7.6%뿐이었다. 투자도 수도권에 편중됐다.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의 70% 이상이 수도권 기업에 집중된 데 반해 지방 기업 투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여기에 전문인력 확보와 판로 개척 등 모든 면에서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열악했다.

문제는 그나마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마저도 성장 과정에서 수도권으로 떠난다는 데 있다.

이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투자사와 대기업, 연구기관, 전문인력 등이 몰려 있는 수도권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시말해, 지원은 지역에서 받고 성장하면 수도권으로 떠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지역 벤처기업들이 창업 이후 투자·실증·판로 확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성장 사다리 구축이 절실하다. 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연계해 중소·벤처기업 중심 집중투자 체계도 만들고 일정기간 지역에 분사를 유지하게 하는 등 지역 정착형 투자전략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40 경 체 부 370-7020 산 업 부 370-7010 사 회 부 370-7030 문화체육부 370-7234	는 성 실 370-7200 임 원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독자관리국 370-7080 세 율 지 사 ☎978-709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드림투데이와 기사 제휴해 제작합니다. 기사 이메일 도메인으로 광남일보(gwangnam.co.kr)와 드림투데이(gjdream.com) 소속 매체를 구분합니다.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